



미국 : 2019년 대학병원 교수의 직급별 성별 임금격차 발표

2020년 2월, 미국 의학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는 미국 대학병원 교수들의 성별 임금격차를 보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해 노동시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협회에서 매년 대학병원 교수들의 임금수준을 공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2020년 처음으로 성별 임금격차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미국 대학병원 교수들의 전체 평균 연봉은 287,100달러(한화 약 3억 6천만 원)이다. 이 수준은 성별에 따라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 격차는 강사들보다는 교수 직급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instructor) 직급의 경우 남성이 247,900달러이고 여성은 211,500달러로 약 14.7%의 성별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다.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직급은 남성이 327,000달러, 여성이 256,000달러로 21.8% 수준의 격차를, 교수(professor) 직급은 남성이 410,500달러, 여성이 330,700달러로 19.4% 수준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과장(chair) 직급은 남성이 716,000달러, 여성이 565,400달러로 21.0% 수준의 격차가 관찰된다.¹⁾

1) Inside Higher Ed(2020.2.7), "Big Gender Gaps in Medical Faculty Pay," Retrived on March 18th, 2020, <https://www.insidehighered.com/quicktakes/2020/02/07/big-gender-gaps-medical-faculty-pay>

미국 : 아마존 노동자들,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

최근 로이터(Reuters) 통신은 16개의 노조 및 노동단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아마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루었다.¹⁾ 이 기사에 따르면, 2020년 11개 주에서 아마존 노동자들이 그들의 권의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코로나19 정국에 들어간 이후에도 미시간, 뉴욕, 일리노이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초점은 어떻게 아마존 노동자들을 대변할 조합을 결성할지에 맞춰져 있다. 대부분의 전국 단위 노조 및 노동단체들은 전통적인 투쟁 방식을

벗어나 보다 여론을 활용하는 방식의 새로운 투쟁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전국 단위에서 진행된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 "Fight for \$15"에서 효과를 보인 바 있다. 특히 온라인 청원, 선출직 공무원들과의 연계, 언론 노출, 정부 산업안전 부처에의 민원 제기 등의 방식이 대두되는데, 이를 통해 아마존에 대중적인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향후 더 많은 조합원을 조직화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한다.

근로조건 문제에 대해 아마존 측에서는 이미 15



달러 이상의 시간당 임금 및 건강 혜택, 경력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자나 점프(Jana Jump)의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최소 800명의 아마존 노동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회사 공식 발표를 통해서도 최소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아마존 노동자들이 팬데믹 국면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아마존이 팬데믹 정국의 수혜자라 할 수 있음에도,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그럼에도 아마존은 1994년 설립 이래 한 번도 노동 조직화를 수용한 적이 없다. 그런 점에서, 팬데믹이 아마존 노동자들의 조합 결성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 Reuters(2020.5.21), “How big unions smooth the way for Amazon worker protests”, Retrieved on May 22th, 2020,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amazon-com-workers/how-big-unions-smooth-the-way-for-amazon-worker-protests-idUSKBN22X19Q>

미국 : 경제 재개가 고령 및 기저질환 노동자들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 미쳐

미국 각 주들이 부분적으로나마 경제 재개를 시행하면서, 재택근무하던 대다수 노동자들이 곧 업무장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고령 혹은 기저질환이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LA 타임스(Los Angeles Times)는 경제 재개가 이 노동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¹⁾ 고령 및 기저질환 노동자들이 보다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아직도 하루에 2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이들을 보호할 것인가.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 통상적인 건강 지침은 일반 노동자들의 업무에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취약 노동자들에게는 충분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특

히 이들의 업무 대부분이 서비스업 등 대인관계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대책 없는 작업장 복귀는 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 동시에 이들을 분리하는 정책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다. 코로나 정국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유급휴가 등은 장기적 해결책이라 볼 수 없으며, 원격 업무나 근무시간 단축 등의 특별 대우는 작업장에서의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비단 고용주로부터의 차별뿐 아니라, 같은 노동자들 간의 편견 및 차별까지 포함한다. 이 문제에 대해, AFL-CIO는 현재 국가 차원의 노동법은 이 상황에 대처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며, 팬데믹 상황의 특수성까지 법적으로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Los Angeles Times(2020.5.22), "Businesses are reopening. If you're older or sick, what happens to your job?", Retrieved on May 24th, 2020, <https://www.latimes.com/business/story/2020-05-22/coronavirus-reopening-preexisting-conditions-seniors-older-workers>

독일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정책

독일 연방의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20년 3월 말 긴급하게 사회보장적 지원법안(Sozialschutzpaket)을 마련한 바 있다. 1차 지원 법안이 발표된 후에도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제한조치 역시 연장되면서,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우려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다만 연방노동사회부(BMAS) 장관인 후버투스 하일(Hubertus Heil)이 이 1차 사회보장적 지원법안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지원정책은 위기 상황에 처한 독일 국민에게 실효성 있는 대응책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와 함께 추가적인 지원대상 또한 비교적 명확해지면서, 지난 5월 15일 제2차 사회보장적 지원법안(Sozialschutzpaket II)이 연방 하원의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중점적 지원정책인 단축근로지원금(Kurzarbeitergeld)에 대한 추가 지원책과,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연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¹⁾

우선 단축근로지원금(Kurzarbeitergeld)의 경우 기존에 최대 12개월 동안 세후 임금의 60%(유자녀 67%)까지 지급되는 체계였으나, 이번 코로나 사태

로 인하여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임금 대비 지급률도 인상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50% 이상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로서 단축근로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1~3개월까지는 기존과 같이 세후 임금의 60%(유자녀 67%)로 동일하지만 4~6개월까지는 세후 임금의 70%(유자녀 77%), 7개월 이후에는 세후 임금의 80%(유자녀 87%)까지 지급률을 인상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약 6억 8천만 유로의 예산도 추가로 배정되었다. 이러한 인상 조치는 한시적인 것으로, 이 법안을 통한 단축근로지원금 인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2차 지원법안이 마련되기 이전부터 단축근로지원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 이전에 지원금을 지급받았던 기간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구직자들의 취업 가능성도 낮아지고, 노동청의 직업 소개 및 구직지원 프로그램(직업교육 등)도 제한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사회법전 제3권에 기초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실업자 중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수급자



격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3개월 연장하도록 하였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으로 추가적

으로 약 19억 5천만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1)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20.5.14), “Weitere Hilfen für Arbeitnehmer”, <https://www.bma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0/sozialschutzpaket-ii-weitere-hilfen-fuer-arbeitnehmer.htm>; Bundesagentur für Arbeit(2020.5.15), “Befristete Verlängerung der Anspruchsdauer beim Arbeitslosengeld – Weiterbewilligung erfolgt automatisch”, Presseinfo Nr. 29, <https://www.arbeitsagentur.de/presse/2020-29-befristete-verlaengerung-arbeitslosengeld-weiterbewilligung-automatisch>

독일 :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업률, 단축근로지원금 신청 근로자 수 증가

독일 노동시장 관련 통계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수치가 발표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선 2020년 3월에 비해 약 0.7%포인트 증가하여 5.8%를 기록한 4월의 실업률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정도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4월의 실업률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경우 계절적인 영향에 기초하여 감소하였던 것에 비추어, 그 증가율에 비해 노동시장이 코로나로 인해 받은 충격은 더욱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4월의 실업자 수는 2019년 같은 달에 비해 약 41만 5천 명이 증가한 것이다.¹⁾

또한 단축근로지원금(Kurzarbeitergeld)의 경우에는 그 신청 대상 근로자가 지난 3월부터 4월 26일까지 약 75만 명이 추가되면서 총 천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지원금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 지난 2009년 경제위기 당시 약 330만 명이 단

축근로지원금을 신청하였던 것에 비추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경기침체가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지 불투명한 측면도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기초하여 연방노동청장인 데트레프 쉐레(Detlef Scheele)는 월레 정기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독일이 전후 최악의 경기침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연방정부와 의회가 비교적 신속히 지원정책들을 마련하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부의 부정적인 예측이 발표되고 있는 것은, 원인이 되는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지원정책들만으로 경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아직 미지수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 Bundesagentur für Arbeit(2020.4.30), “Der Arbeitsmarkt im April 2020”, Presseinfo Nr. 27, <https://www.arbeitsagentur.de/presse/2020-27-der-arbeitsmarkt-im-april-2020>

영국 : 일부 장애인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복귀해야 할 상황

2020년 5월 18일 가디언지는 일부 장애인들과 그의 보호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직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¹⁾ 현재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임상적으로 극히 취약(Clinically Extremely Vulnerable, 이하 CEV)’한 것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식료품 배달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자격 요건으로 인해 상당수의 고위험 장애인들이 CEV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²⁾ 일부 고용주들이 이를 유급휴가 허용 조건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CEV로 인정받지 못한 장애인들이나 그들을 간병해야 하는 보호

자들이 출근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노동자 중에는 교사나 슈퍼마켓 점원 등 핵심 노동자(key worker)도 있다. 또한 영국 정부에 CEV로 등록된 근로자 수는 현재 2백여만 명에 불과하지만 최근 한 연구는 영국 정부의 봉쇄 완화 계획과 관련하여 기저 질환이 있는 8백여만 명의 근로자가 업무의 즉각적 복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대변인은 고용주들이 CEV 등록 여부를 출근 가능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근로자들은 정부 당국에 도움을 청하라고 당부했다.

1) The Guardian(2020.5.18), “Disabled people in UK threatened with sack unless they go back to work”,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may/18/disabled-people-in-uk-threatened-with-sack-unless-they-go-back-to-work-coronavirus>

2) The Guardian(2020.4.19), “Disabled people left off coronavirus vulnerable list go without food”,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apr/19/disabled-people-left-off-coronavirus-vulnerable-list-go-without-food>



영국 : 정부, 모든 외국인 의료인력에게 국민보건서비스(NHS) 보험료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

2020년 5월 21일 영국 정부가 비자 발급 시 부과하는 국민보건서비스(NHS) 보험료의 면제대상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모든 의료 관련 인력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일부만 보험료를 면제받고 있었다.¹⁾ 그러나 현재 연 400파운드(한화 약 60만 원)인 보험료가 2020년 10월부터 연 624파운드(한화 약 95만 원)로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의료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노동당과 영국의료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 등은 보험료 면제 대상 확대를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왔다.²⁾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는 5월 20일까지만 해도 의

료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³⁾ 그러나 보수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총리의 결정에 반발하는 등 압박이 보다 강해지면서, 다음 날 대변인을 통해 간병인, 사회복지사, 그리고 NHS에서 근무하는 청소부 등 모든 직원에게 NHS 보험료를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하게 되었다.

이날 발표에 대해 키어 스타머(Sir Keir Starmer) 영국 노동당 대표는 “상식적인 예의(common decency)의 승리”라고 평가하였으며, 보수당에서도 윌리엄 래그(William Wragg) 의원이 의견을 듣고 반영할 줄 아는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준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1) BBC(2020.5.21), “NHS fees to be scrapped for overseas health staff and care workers”, <https://www.bbc.com/news/uk-politics-52761052>
- 2) The Guardian(2020.5.19), “UK government urged to scrap 624 pounds NHS charge for migrant care workers”,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may/19/uk-government-urged-to-scrap-624-nhs-charge-for-migrant-care-workers-helping-combat-coronavirus>
- 3) BBC(2020.5.20), “Coronavirus : PM rejects call to scrap NHS fee for overseas carers”, <https://www.bbc.com/news/uk-politics-52732463>

스웨덴 : 일부 대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검사 실시

스포티파이(Spotify), 에이치앤엠(H&M), 텔레2(Tele2) 등 스웨덴의 몇몇 대기업들은 직원을 대상으로 민간 의료기기업체 워랩스(Werlabs)가 제공하는 코로나19 항체검사를 실시하기 시작했다.¹⁾

코로나19 항체가 코로나19 재감염을 막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스웨덴의 대기업들은 항체검사를 통해 직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직장복귀 가능성을 살펴보려 하고

있다.

스톡홀름 지역에 2,0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이동통신기업 텔레2는 검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받은 직원의 경우, 사무실로 복귀할 수 있으며 평상시 근무시간 수준으로 일할 수 있도록 권할 예정이라 밝혔다.

패션기업인 에이치앤엠 역시 5,000여 명의 직원들의 항체검사를 시작했는데, 직원들 중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 유출을 우려하여 기업과 공공보건청에게 개별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위랩스의 CEO 헨릭 포쉬베리(Henrik Forsberg)는 이들이 제공하고 있는 코로나19 검사는 이윤 창

출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검사를 요청한 기업들이 지불하고 있는 금액은 원가 수준으로 검사로 인해 추가적인 이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위랩스는 스웨덴 내 코로나19 검사를 제공하는 몇몇 민간기업 중 하나이며 현재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사 결과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공공보건청으로 보내고 있다.

현재 공공보건청은 자원, 인력 과부하를 막기 위해 코로나19 우선 검사 대상자를 취약계층, 보건의료 인력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공공보건청의 해당 지침에 따라, 위랩스도 스톡홀름 지역의 기업 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검사 건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1) The Local(2020.5.8), "Spotify and other large Swedish companies start mass coronavirus-testing of staff", <https://www.thelocal.se/20200508/spotify-and-other-large-swedish-companies-start-mass-coronavirus-testing-of-staff>

프랑스 : 정부, 부분실업지원금 정부 부담 낮추고 일부 기업이 부담하는 방안 추진

정부는 부분실업 상태인 임금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 수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정책이 시행된 후, 정부와 고용보험공단(Unédic)은 부분실업 노동자들의 임금의 70%(또는 순임금의 84%)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노동부는 6월 1일부터 공중보건상의 이유로 폐쇄된 영업장을 제외하고 정부 지원금 수준을 임금의 60%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¹⁾ 정부는 무리엘 페니코(Muriel Pénicaud) 노동부 장관이 4월 말에

제안했듯이 해고의 물결을 피하기 위해 도입된 방대하고 전례 없는 부분실업정책을 자연스럽게 종료하게 될 것이다. 노동부의 추산치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민간부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60만 명의 근로자들이 평균 2.8주 기간 동안 보상을 받았다. 기존 보상 수준이 지속될 경우 24억 유로 이상의 공공지출이 예상되며, 정부가 이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 지원금이 임금의 70%에서 60% 수준으로 감소할 경우 감소액(14%)



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며, 이는 부분실업 신청의 유인을 하락시키나 노동자들은 순임금의 84%를 계속 받게 될 것이다. 이 법안은 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보건 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법안이 채택된 후에 법령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노동부는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연합회(CPME)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프랑수아 아셀링(François Asselin) 회장은 정부의 조치가 예상했던 것보다 급격하지만 현재 부분실업 상태인 직원의 업무 복귀와 관련하여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회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1) Les Echos(2020.5.25), “Chômage partiel : l'Etat se désengage en douceur”, <https://www.lesechos.fr/economie-france/social/exclusif-chomage-partiel-letat-ne-prendra-plus-en-charge-que-60-du-brut-1205530>

프랑스 :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급등

프랑스 통계청(INSEE)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4월에 상당히 둔화되어 1년 동안 0.4% 증가한 반면 농산물의 경우 지난 12개월 동안 증가율이 18%에 달했다. 이러한 가격 상승 현상은 수요 증가와 일시적인 공급 감소에 기인한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 프랑스인들의 식료품 지출은 3월 전년대비 8%나 증가했다. 동시에 봉쇄정책으로 인해 식품산업의 공급망이 교란되어 포장에 어려움이 있었고 농업부문은 직접적인 인력부족을 겪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최근 미국 또한 도축장의 강제 폐쇄로 인해 돼지고기의 가격이 25% 증가한 사례가 있었

다. 보건 위기가 계속되면 일부 제품의 가격이 이처럼 계속 상승할 수 있다. 반면에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정책이 정상적인 소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월 자동차 및 가정 용품과 같은 내구재에 대한 지출은 49% 급락했으며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지출도 54% 감소했고 총소비는 18%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었다. 향후 몇 개월 동안 식품 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실업과 파산의 여파는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보건 위기의 진화에 달려 있다.¹⁾

1) Les Echos(2020.4.30), “L'inflation ralentit fortement mais le prix des produits frais s'envole pendant le confinement”, <https://www.lesechos.fr/economie-france/conjoncture/linflation-ralentit-fortement-mais-le-prix-des-produits-frais-senvole-pendant-le-confinement-1199539>

핀란드 : 기본소득 실험 최종보고서 발표

핀란드 사회보험청(Kela)는 핀란드에서 실시한 2년간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의 실험 결과 평가에 따르면 기본소득이 실험 참가자들의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구직 활동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¹⁾

유하 시필라(Juha Sipilä) 정부 주도하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작된 기본소득 실험은 무작위로 선정된 2,000명의 실업자들에게 매달 560유로(한화 76만 원)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일을 하거나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 실험은 핀란드의 복지시스템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변화할 근로생활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사회보험청은 기본소득 실험 보고서를 통해 지난 2년간 기본소득을 수급한 실험 참가자들이 실험 대조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신적 압박, 우울, 외로움, 슬픔 등의 감정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기본소득이 구직활동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상관관계 파악

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VATT 경제연구소(VATT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의 선임연구원 카리 해말라이넨(Kari Hämmäläinen)은 지난 정부에서 2018년 실시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기본소득 실험의 2년차와 시기가 겹쳐 이들 중 어떤 정책이 구직활동에 영향을 끼쳤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헬싱키대학교의 헬레나 블롬버그-크롤(Helena Blomberg-Kroll) 교수는 실험 대상자 중에서 교육수준이나 배경이 조금 더 나은 이들은 기본소득으로 생긴 기회(구직 및 사업 시작 등)를 잘 활용했지만 환경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기본소득이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회보건부(Minister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아이노-카이사 페코넨(Aino-Kaisa Pekonen) 장관은 기본소득 실험이 실업자의 구직활동에 끼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실험을 통해 핀란드 사회보장체계 개혁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며 실험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1) Yle(2020.5.6), "Final verdict on Finland's basic income trial: More happiness but little employment effect", https://yle.fi/uutiset/osasto/news/final_verdict_on_finlands_basic_income_trial_more_happiness_but_little_employment_effect/11337944



일본 : 남녀 간 임금격차 역대 최저치 기록, ‘여성/남녀 전체’ 월평균 임금 최고치 기록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는 2019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일반노동자의 월평균임금(상여, 잔업수당 제외)은 전년대비 0.5% 증가한 30만 7,700엔이다. 성별로는 남성은 0.1% 증가한 33만 8,000엔, 여성은 1.4% 증가한 25만 1,000엔이며, 여성과 남녀 전체 월평균 임금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남성의 임금을 100으로 계산했을 때 여성 임금 비율은 74.3으로 남녀 임금격차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하여 후생노동성의 담당자는 “남성은 중고령층에서 임금이 줄고, 전체적인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여성의 구성비율이 높은 도소매업에서(임금이) 증가한 것이 배경”라고 분석하였다.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44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전년대비 임금이 증가하였으나, 45세 이상에서는 60~69세를 제외하면 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19세 이하와 70세 이상의 연령대를 제외하면,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대비 임금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50~54세가 1.9%, 60~64세가 3.1%, 65~69세가 2.2%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모든 고용형태에서 임금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번 조사부터 모든 산업에서 단시간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1,000엔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조사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집계하고 있는데,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2만 3,100엔으로, 일반 노동자의 70% 정도에 불과하다.¹⁾

1) ビジネス・レーパー・トレンド(2020.5), 「男女間賃金格差が過去最小に一厚生労働省」, <https://www.jil.go.jp/kokunai/blt/backnumber/2020/05/040.pdf>

일본 : 6월 1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산재 인정기준에 포함

후생노동성은 2020년 5월 15일, 정신장애에 관한 산재 인정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항목을 신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해당 항목에서는 상사의 신체적·정신적 공격 때문에 정신장애가 발병하게 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며, 이는 6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의무화한 「개정노동시책종합추진법」

이 실행되는 것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산재 인정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심한) 괴롭힘이나 폭행’ 항목을 이용하여 산재 여부를 판단해 왔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2018년도에 정신장애를 이 유로 산재를 인정 받은 사례는 465건이며, 이 중 직 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는 69건이었다. 후생

노동성에서는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산재 기준 에 포함되면, 산재 신청이 용이해지고 산재 인정도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¹⁾

1) 読売新聞(2020.5.15), 「精神障害の労災基準に「パワハラ」新設…6月適用へ」, <https://yomidr.yomiuri.co.jp/article/20200515-OYTEW515428>

중국 : 약 3억 농민공의 최근 변화 추세

2019년 중국에서 농민공 규모는 더 커지고, 농 민공의 성(省) 내 이동이 증가하는 대신 성 간 이동 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가통계국이 발 표한 「2019년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 보고」에 따 르면, 2019년 농민공은 총 2억 9,077만 명으로 전 년대비 241만 명이 증가했다.¹⁾ 이 중 현지 농민공 은 1억 1,652만 명으로 전년대비 82만 명(0.7%) 증 가했고, 타지로 이동한 농민공은 1억 7,425만 명 으로 전년대비 159만 명(0.9%) 증가했다. 타지로 이동한 농민공 중에서 성 내에서 취업한 농민공 은 9,917만 명으로 전년대비 245만 명(2.5%) 증가 했고, 다른 성에서 취업한 농민공은 7,589만 명으 로 전년대비 86만 명(1.1%) 감소했다. 농민공의 기 본 특징은 세 가지인데, 첫째, 여성 및 배우자가 있 는 농민공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농민공 중 남성은 64.9%, 여성은 35.1%인데, 여성의 비율이 전 년대비 0.3% 증가했다. 그리고 전체 농민공 중 배 우자가 있는 농민공은 80.2%로 전년대비 0.5% 증 가했다. 둘째, 50세 이상의 농민공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농민공의 평균 연령은 40.8세로 전년

대비 0.6세 상승했다. 40세 이하 농민공은 전체의 50.6%로 전년대비 1.5% 감소했고, 50세 이상 농민 공은 24.6%로 전년대비 2.2% 증가해 5년 동안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대학 이상 학력 의 농민공이 약간 증가했다. 전체 농민공 중 무학 력자가 1%, 초등학교 상당의 학력자가 15.3%, 중 학교 상당의 학력자가 56%, 고등학교 상당의 학력 자가 16.6%, 대학 이상의 학력자가 11.1%로 이 중 대학 이상 학력자의 비중이 전년대비 0.2% 증가했 다. 농민공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3차 산업 취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차 산업 에 종사하는 농민공은 전체 농민공 중 51%로 전년 대비 0.5% 증가한 반면 2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 은 48.6%로 전년대비 0.5% 감소했다. 그리고 농민 공의 월평균 소득은 3,962위안으로 전년대비 241 위안(6.5%) 증가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이 어가고 있다. 이 중 타지로 이동한 농민공의 소득이 현지 농민공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타지 로 이동한 농민공의 월평균 소득은 4,427위안으로 전년대비 320위안(7.8%) 증가한 반면 현지 농민



공은 3,500위안으로 전년대비 160위안(4.8%) 증가에 그쳤다. 도시에서 거주 중인 농민공의 주거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 거주 농민공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0.4제곱미터로 전년대비 0.2제곱미터 확대되었고, 주거지에 난방시설과 목욕시설이 있는 비중이 각각

52.2%와 83.7%로 전년대비 1.5%, 1.6% 증가했다. 도시 거주 농민공 자녀 교육의 경우, 3~5세 아동과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교육 조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진학이나 교육 비용 면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 國家統計局(2020.4.30), 「2019年農民工監測調查報告」, http://www.stats.gov.cn/tjsj/zxfb/202004/t20200430_1742724.html

중국 : 도시 지역 노동자의 임금 현황과 특징

2019년 중국의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연간 주요 사업 수익 2천만 위안 이상 기업)의 직원 평균 연봉은 전년대비 10.0% 상승한 75,229위안으로 나타났다.¹⁾ 그중 중간관리자 이상 직원의 평균 연봉은 156,892위안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다른 직원의 2.09배 수준이었다. 반면 생산제조 관련 직원의 평균 연봉은 59,586위안으로 다른 직원의 79%에 불과해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중 정보 전송·소프트웨어·정보기술 서비스업이 160,170위안으로 가장 높았고, 과학연구 및 기술 서비스업(135,412위안)과 전력·열에너지·가스·수도 공급업(110,822위안)이 그 뒤를 이었다. 평균 연봉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요식업(48,009위안)과 수리(水利)·환경·공공시설 관리업(51,848위안), 주민 대상 서비스업(52,049위안) 등이었다. 기업 유형별로는 도시 지역 공영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이 90,501위안, 민영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이

53,604위안이었다.

2019년 도시 지역 노동자 평균 임금 현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²⁾ 첫째, 광산업과 제조업 분야의 핵심 업종 평균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9년 광산업 분야 도시 지역 공영기업과 민영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은 각각 11.8%와 12.7% 상승했다. 제조업 직원의 평균 임금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제조업 분야 도시 지역 공영기업과 민영기업 평균 연봉은 각각 8.4%와 7.3% 상승했다. 그중 제약업과 우주항공 등과 같은 첨단기술 제조업 직원의 평균 임금이 빠르게 상승했다. 둘째, 과학 교육·정보·교통 등과 같은 신흥산업의 평균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도시 지역 공영기업 중 연구 및 실험 개발, 기술 홍보 및 응용 서비스, 고등교육 직원의 평균 연봉은 각각 15.9%, 10.2%, 13.2% 상승했고, 항공운수업과 철도운수업 직원의 평균 연봉은 각각 11.5%와 10.0% 상승했

다. 셋째, 공공서비스 및 소비 증가와 관련된 업종의 평균 임금이 비교적 빠르게 상승했다. 생활수준 향상과 문화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관련 업종 직원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했는데, 라디오·텔레비전·영화 업종과 뉴스 및 출판 업종 직원의 평균 연봉이

각각 13.7%와 13.4% 상승했고, 건강 및 사회복지 관련 직원의 평균 연봉이 11.0%, 자동차 전자제품 및 가전제품 수리업·우편업 등 직원의 평균 연봉이 16.6% 상승했다.

- 1) 國家統計局(2020.5.15), 「2019年規模以上企業分崗位就業人員平均工資情況」, http://www.stats.gov.cn/tjsj/zxfb/202005/t20200515_1745762.html
- 2) 國家統計局(2020.5.15), 「國家統計局人口和就業統計司副司長孟灿文解讀2019年城鎮單位就業人員平均工資數據」, http://www.stats.gov.cn/tjsj/sjcd/202005/t20200515_1745758.html

브라질 : 소득격차 심화, 상위 1% 월평균 소득이 하위 50%의 33.7배

2019년 기준 브라질 상위 1%의 월평균 소득이 하위 50% 월평균 소득의 3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 발표에 따르면, 상위 1%의 월평균 소득은 28,659헤알(한화 약 643만 9천 원), 하위 50%의 소득은 850헤알(한화 약 19만 원)이며,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9년 0.50으로 집계됐다. 2012년과 2015년 사이 지니계수가 0.494까지 내려갔으나 2016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308헤알(한화 51만 7천 원)이며,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노동자의 규모는 2018년 취업 인구의 43.4%에서 2019년 44.1%로 약간 증가하였다. 1인당 가계 월평균 수입은 1,406헤알(한화 31만 5천 원)로 가계의 72.5%가 노동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7.5%는 주로 퇴직금 또는 연금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인종, 성별, 학력 수준에 따른 월평균 소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브라질 경제의 70%가 집중된 대도시 상파울루를 포함한 남동부 지역의 평균소득이 2,645헤알(한화 59만 3천 원)로 가장 높았으며, 북동쪽은 1,510헤알(한화 33만 8천 원)로 가장 낮았다. 2019년 기준 브라질의 인구는 2억 950만 명이며, 전체 인구의 42.2%가 남동쪽에 밀집해 있다. 인종별로는 백인의 월평균 소득은 2,999헤알(한화 67만 2천 원)로 흑인의 1,673헤알(한화 37만 5천 원)에 비해 1.5배를 약간 상회하며, 성별로 보면 남성의 월평균 소득은 2,555헤알(한화 57만 3천 원)로 여성의 1,985헤알(한화 44만 5천 원)보다 28.7% 높았다. 특히 학력 수준에 따른 소득격차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학교 등 고등교육 졸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5,108헤알(한화 114만 5천 원)로 교육 수준이 낮은 노동자의 월평균 소



득인 918헤알(한화 20만 5천 원)보다 6배 높았다. 빈곤 퇴치를 위해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빈곤층 생계수당지급 프로그램인 ‘볼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를 통해 1천 380만(개인가구의 13.5%)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월평균 생계비로 188헤알(한화 약 4만 2천 원)을 지원받았다. 북동부 및 북

부 지역은 프로그램 수혜 가구의 비율이 각각 25%와 27.6%로 가장 높았으며, 남부 지역은 4.7%에 불과했다. 빈곤 가구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기초서비스 조사에서 가구별로 정화조 시설 등 위생시설을 갖춘 곳은 39.5%에 불과했고, 세탁기 보유율은 32%, 마이크로컴퓨터 보유율은 12.6%에 그쳤다.¹⁾

1) IBGE(2020.5.6), “PNAD Contínua 2019: rendimento do 1% que ganha mais equivale a 33,7 vezes o da metade da população que ganha menos”, <https://agenciadenoticias.ibge.gov.br/agencia-sala-de-imprensa/2013-agencia-de-noticias/releases/27594-pnad-continua-2019-rendimento-do-1-que-ganha-mais-equivale-a-33-7-vezes-o-da-metade-da-populacao-que-ganha-menos>

브라질 :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노동자 더 길게 일하고 더 적게 벌어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비대면 소비의 확대와 함께 배달 업무가 급증하고 있다. 브라질 노동개혁 연구 및 모니터링을 위한 네트워크(Remir Trabalho)는 지난 4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배달 노동자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브라질 26개 도시의 배달 노동자 2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앱 종사자의 노동시간은 증가하였으나 임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52%는 주 7일, 25.4%는 주 6일 근무하였으며,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임금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3%에 달했다. 반면 27.6%는 소득 변동이 없으며 10.3%는 소득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배달 노동자의 72.8%는 주당 520헤알(한화 약 34만 1천 원)의 소득을 얻었는

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48.7%가 동일한 소득을 얻었다. 배달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회사의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3%가 회사로부터 손 소독제 및 마스크 등을 지급받지 못해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유니캄피 대학 노조·노동경제연구소(CESIT)의 루드밀라 코스텍(Ludmila Costhek) 연구원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달앱 기업들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줄여 수입을 과도하게 조정하고 있지만, 배달 노동자들은 위험한 노동환경에 처하더라도 생계 때문에 일을 중단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¹⁾ 브라질 신문 폴야 지 상파울루(FOLHA DE S.PAULO)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이 급증하면서 3월과 4월 상파울루 배달 노동자 중 56명이 사망하여 전년동월 사망자

수인 38명에 비해 47.3%나 증가했다고 보도하였다. 브라질 학계는 2019년부터 배달 노동 등 모바일 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이뤄지는 플랫폼 노

동에 대해 주목해 왔으며,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플랫폼 노동이 사회문제화되면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1) BBC BRASIL(2020.5.7), “Coronavírus: entregadores de aplicativo trabalham mais e ganham menos na pandemia, diz pesquisa”, <https://www.bbc.com/portuguese/brasil-52564246>.